



이 원 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준비 정책 방향

‘유병장수(有病長壽) 시대’. 어느 보험회사의 광고 카피 문구라고 한다. 그만큼 길어진 노후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스위스, 일본 등과 같은 장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OECD Health Data(2013)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81.1년으로 스위스(82.8년), 일본·이탈리아(82.7년) 다음으로 높은 기대수명을 자랑한다. 이는 우수한 보건의료 시스템과 짧은 기간에 이룬 경제적 성취가 결합된 성취의 산물이다. 일종의 성공의 역설인 셈이다.

반세기전만해도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라고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봉양과 자녀의 교육, 결혼자금 부담 등 자녀 뒷바라지에 우선순위를 둔 채 생활한 세대로서 자신들의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실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율은 46.3%에 불과하며,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 역시 37.3%에 불과하다. 특히 노후소득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도 42%에 불과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갖는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도 노후준비가 충분치 못한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고령사회의 기반을 갖추고 개인의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

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10년내 외에 고령인구 천만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앞으로는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젊은 노동인구가 아니라 고령 인력의 체계적 활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 그리고 시간을 은퇴 이후에도 개인과 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교육, 복지 시스템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을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개인적 노후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 2차 새로마지 플랜의 고령사회 분야 계획을 보완해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안정적 노후준비 인프라 구축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노후준비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소득, 건강, 사회참여(일자리), 주거·교통, 노후설계 지원 분야의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 분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사적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내실있는 다층적 노후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다양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건강 분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의료

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회참여(일자리) 분야: 고령근로자가 보다 오래 주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생학습체계 내실화를 통해 전직 및 이직, 사회공헌 등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주거·교통 분야: 주거 및 교통 체계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특히 고령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 개조 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노후설계 지원 분야: 노후를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와 경력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및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후설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정부는 국민들이 쉽게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체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삼성생명·보험개발연구원 등 민관합동으로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를 보급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직장·공공기관 중 일부를 활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세기전만 해도 60세를 넘어서면 황혼(黃昏)의 시기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은 인생의 전반부만

을 활력있는 시기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고령사회에서는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듯 정해진 황혼(黃昏)의 시기는 없다. 정부 역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고령사회에 맞도록 꾸준히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 개개인의 자기주도적 노후준비를 위

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또다른 기회가 되는 것과 같이 고령화와 장수(長壽)가 국가와 개인에게 위기와 두려움이 아닌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경희**